

적폐수사 영장기각 반발 10여건... '수사편의' 제동거는 法

조운선 영장 기각도 강력 반발
"수사편의주의 관행 개선 안돼"

최근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하는 경향을 보여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검찰의 관행과 구속을 처벌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검찰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 반발한 사례는 10여건에 이른다.

지난달 28일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조 전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맷길 공작'에 관련한 의혹을 받는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반발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와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9월 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면 공격에 나섰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국정원 댓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의 영장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에 따라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는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런 모습이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과 여론의 힘을 등에 업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구속을 좌우하던 옛날에는 검사가 영장 기각한 판사 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으로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죄가 무거워서 실행 선수가 거의 확실하거나 신병 확보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도망 혹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일단 붙잡아 놓고 조사하면 편하다는 수사 편의주의적 관행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하는 법관도 괴롭다"며 "법이 정한 기준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한 비난이 쏟아진다"고 선부른 여론재판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일었다. 변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관련 혐의로 구속 전 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글·사진=이병종 기자 jcker@metroseoul.co.kr

판문점 연락 채널 재개동 남북관계 초미 관심사로

23개월간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 연락관은 오전 9시30분께 전날 개통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개시통화에 성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통화가 이뤄져 상호 회선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우리 측이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언급한 뒤 통화를 끝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이날부터 우리가 고위급회담을 오는 9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회담 일정과 의제,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 시 북측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오게 된다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대표를 관계부처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담의 성격, 의제, 이런 것들을 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표단을 꾸려온 시간의 관례 등을 참고해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북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있는 만큼 주축이 돼 일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한 자리에서 "알다시피 우리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간 대화로 이어져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과 나누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文대통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한일 합의' 공식 사과

할머니 8명 초청해 함께 오찬
"뜻에 어긋나는 합의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전 정권 시절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쾌유를 빌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이옥선 할머니 등 8명과 오찬을 하며 "(한국과 일본의) 지난 (위안부)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2·28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하는데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있다. /청와대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할머니 8명 외에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인 뒤로 잘 뵈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할머니들을 보니 꼭 제 어머니를 뵈는 마음"이라며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

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돼 기쁘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꾸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전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한 자리에서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자 청와대에 모셨는데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셔서 싸워주셔야 한다"며 "할머니께서 쾌유해 건강해지시고 후세 교육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께서 바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청와대에서의 오찬을 앞두고 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탓에 오찬에 불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인사를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병문안을 마치면서 김 할머니에게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김정숙 여사가 마련한 목도리, 장갑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때 김 할머니를 초청했고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정당 강령 모색

공식 통합절차에 돌입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통합정당의 정강·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했다.

이 의원은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 이태홍 부원장과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양당 정강·정책을 분야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바른정당은 개혁적이고 온건한 보수를 표방한다"며 "통합정당은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을 표방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대북관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 두 대표의 차이는 이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북관) 차이와 똑같다"며 "약간의 차이는 오히려 정당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교육, 복지 정책은 물론 노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회의 출범회의에서 양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태규·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오신환 원내대표. /연철뉴스

사 문제에서도 양당의 정강·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최 부소장 역시 "두 당의 정강·정책 구성과 내용을 뜯어보니 구조적 유사성이 높고 분야별 구성과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정당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개혁보수,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렇게 칭하는 것은 양당 통합의 의미를 모두 살리지 못한다"며 "합집합 개념의 '중도개혁보수정당' 혹은 교집합 개념의 '합리적 개혁정당'을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